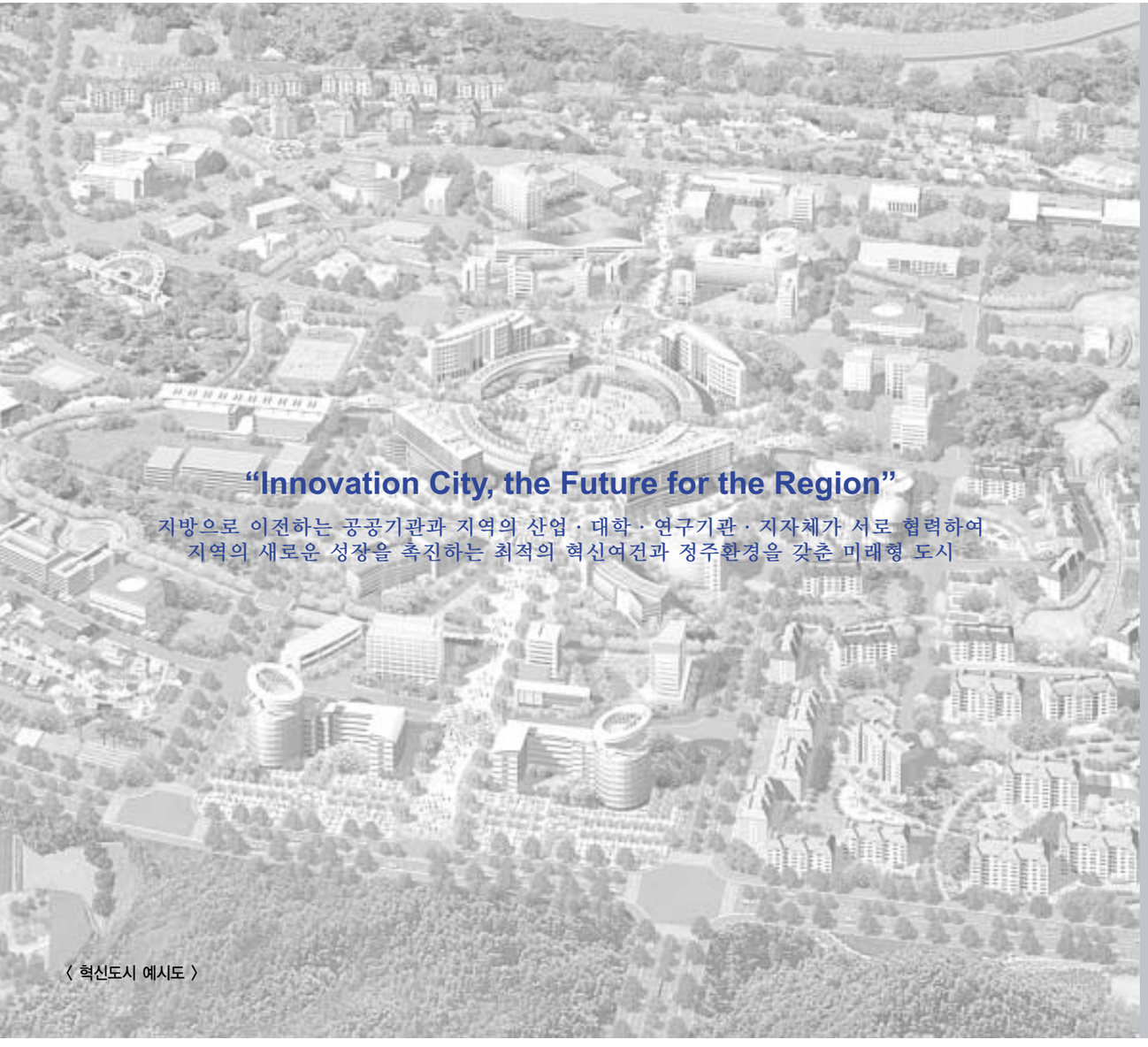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22-1 생산성빌딩 3층
http://www.balance.go.kr

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4동
http://www.moct.go.kr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건설교통부



“Innovation City, the Future for the Region”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 · 대학 · 연구기관 ·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

〈 혁신도시 예시도 〉

I

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

1. 세계질서의 변화
2. 21세기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
3.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

Ⅰ. 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

1. 세계질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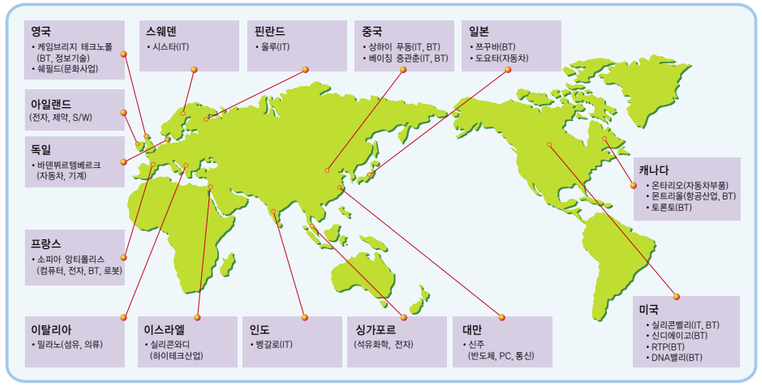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블럭화

- 지금은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지식, 정보 등이 주권과 국경을 초월하여 교환 · 교류 · 조정되는 세계화 시대
- 한편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긴밀도에 따라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간 경제블럭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블럭간 경쟁은 격화
- 동북아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

세계는 빠르게 지역 중심으로 재편 중

- 세계화의 진전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세계는 국가 중심에서 도시와 지역 중심으로 재편
  -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지역 내 네트워크 역량이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
  - 지식기반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지역 육성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
-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해가는 것은 실리콘밸리(미국)나 시스타(스웨덴) 같은 지역으로,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클러스터에 기반한 특성화된 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
  - 더불어 이들 지역에 세계의 자본과 기술, 인재를 모으기 위해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에 돌입

■ 세계 각국의 주요 혁신클러스터 ■



세계는 지금

세계화의 진전,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국가 중심에서
도시와 지역 중심으로
재편 중

2. 21세기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0세기 발전전략의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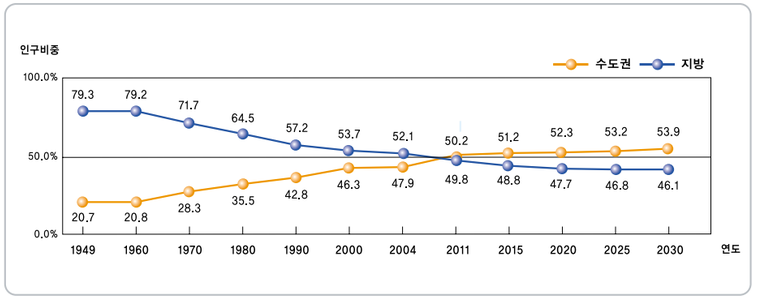
- 우리는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요소투입형 양적 성장전략으로 중진국 진입에 성공
  - 동시에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로 외환위기 초래 및 국민소득 1만불의 정체 지속
- 21세기 지식기반형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 필요

■ 경제발전단계별 성장방식 ■

구 분	요소투입형 성장 방식	혁신주도형 성장 방식
시대여건	산업화시대(20세기)	지식기반시대(21세기)
생산요소	노동, 자본, 토지	지식, 기술, 정보
경쟁력 원천	저임금, 낮은 지가 등	혁신능력
생산활동	노동집약적 조립생산	산업클러스터

-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적으로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
  -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토 전체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 수도권 일극 집중의 가속화는 수도권의 질적 성장에 지장을 주고, 지방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 초래

■ 수도권 인구집중추이 (통계청 2005년) ■



수도권 집중현황

구 분	비중(%)
행정구역 면적	11.8
인구	47.9
지역내총생산액	48.1
사업체수	46.2
제조업체수	51.6
4년제 대학수	39.2
100대기업본사	87.0

양적 성장전략으로 생산성 정체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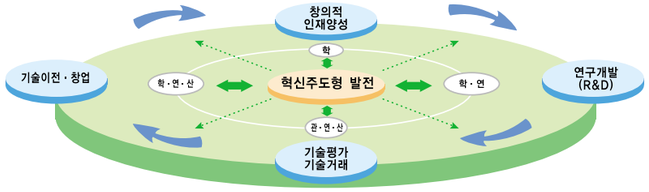
선진한국으로 도약

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
↑
불균형 발전으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대전환

▶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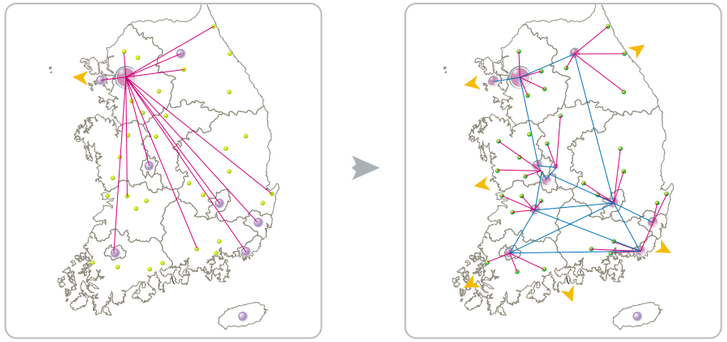
■ 혁신주도형 발전의 선순환 구조 ■



▶ 각 지역의 특화된 경쟁력을 살린 발전전략 추진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집중 구조를 다극분산 구조로 개편

- 수도권은 높은 산업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확보해 세계도시로 성장
- 지방은 특성화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도약

■ 일극집중에서 다극분산 국토구조로 개편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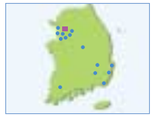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 국토구조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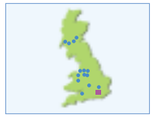
■ 동북아시대 개방형 한반도 공간구상 ■

한국 및 G7 주요 국가의
도시분포 (인구상위 15개도시)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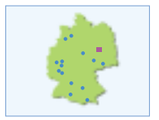


■ 영국



■ 프랑스

■ 독일



선진국가의 주요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
(우리나라는 15대 도시 중 8개 도시가 수도권에 집중)

3.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연구개발 효율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양질의 연구 성과를 목표로 과감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비 투자
  ·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비('04년)는 GDP 대비 2.64%로 선진국 수준(세계 11위)이나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은 낮음
  · GDP 대비 기술수지(%, 2001년 기준) : 영국 0.6, 미국 0.2, 일본 0.1, 한국 −0.6
- 핵심 · 원천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시장수요에 초점을 둔 맞춤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 대학 ·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 활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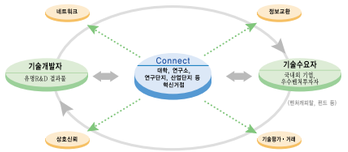
기술평가 · 기술거래 · 기술금융 · 기술창업 활성화

- 신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자금 등 기술 금융 조성
- 기술이전 · 거래에 대한 기반 조성 구축
- 기술평가 · 기술금융 시스템 구축
-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

산학협력 증진

- 대학 · 기업 · 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신뢰,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과 혁신선도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구조로 개선
-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지역연구중심대학 육성
-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연계하는 'Connect Korea' 프로그램 확산

〈 Connect System 〉



교육혁신

-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확립
-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화 · 특성화된 대학 육성
- 우수인력의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유인체계 강화

지역인재양성

- 지역인재양성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산업인력양성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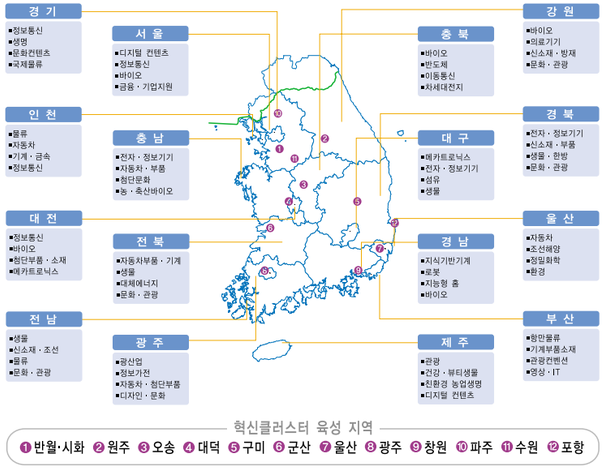
균형발전전략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 지역혁신 성공사례의 창출 · 발굴 및 확산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 지역의 비교 우위와 산업기반, 차세대 동력산업 등을 고려하여 전국 16개 광역시 · 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 선정 · 육성
- 대덕 등 세계적 초일류 혁신클러스터 2~3개와 창원(기계), 울산(자동차) 등 일류 혁신클러스터 6~7개 육성을 목표로 2008년까지 기반 구축



산학협력의 괴리 · 단절
- 대학, 연구소의 R&D와 시장 수요와의 괴리
- 산 · 학 · 연 연계 시스템 취약
- 창의적 · 맞춤형 인력양성 미흡

산학협력의 강화
- 기술개발자와 수요자의 만남 제공 및 맞춤형 연구개발
- 자본 · 기술 · 인력의 집적을 통한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 정착

12대 주요 혁신클러스터 발전비전

정부지원	대덕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창원	첨단기계 클러스터
	구미	디지털 전자산업 선도
	울산	자동차 부품 글로벌 공급기지
	반월시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원주	첨단의료기기 산업거점
	군산	자동차 · 기계부품 기지
	오송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민간주도	수원	삼성반도체 · 디지털밸리
	파주	LG-Philips LCD클러스터
	포항	포항공대 첨단소재 공급기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상생과 도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는 선도 역할 수행
- 충청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일극 중심의 국토를 다극 체계로 전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 지방의 성장동력창출 및 자립화 촉진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
  ·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
-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간의 투자로 도시를 개발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동북아 경제중심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유도

-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신수도권 건설, 2천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재창조

지역특화발전특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

- 지역특성에 따라 일정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촉진
  ('05년 4월말 현재 총 16개 특구지정)
- 신활력사업의 추진 (신활력 시 · 군 7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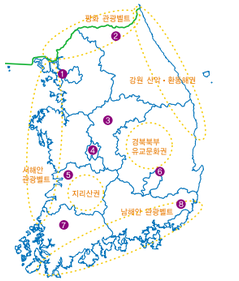
신활력사업 5대 정책과제

-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SOC 확충
- 1, 2, 3차 산업의 융합
- 도농상생을 위한 5도2촌 활성화
-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

지역문화관광산업 육성

-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발굴,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 육성
- 광역권 문화관광자원 벨트와 지역별 문화관광거점 육성
- 지역문화관광 마케팅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지역의 전략 · 특화산업 등과 관광산업의 연계 강화
- 창의적 선도적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인프라 및 지역 문화기반 조성

6대 광역관광벨트와
8대문화 산업클러스터 육성



❶ 부천-출판만화 ❺ 전주-소리문화 · 디지털 영상
❷ 춘천-에니메이션 ❻ 대구-게임 · 모바일컨텐츠
❸ 청주-에듀테인먼트 ❼ 광주-디자인 · 캐릭터
❹ 대전-특수영상 ❽ 부산-영상 · 가상현실

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1.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
2. 혁신도시 건설
3. 공공기관 이전
4.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5. 국내 · 외 이전사례

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1.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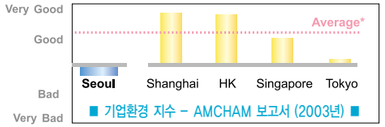
수도권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은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 중심의 세계일류도시로 거듭나야 가능
- 기존의 양적 팽창을 통한 도시의 확장과 개발은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환경에서 세계도시로 성장하는데 도리어 장애가 되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
- 수도권이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삶의 질과 지식 · 기술 중심의 높은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양적 팽창의 흐름을 멈추게 할 정책이 시급히 필요
  - 파리, 런던, 시드니 등은 분산정책을 통해 양적 팽창을 강력히 억제하면서 환경 · 문화 등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식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질적 성장전략으로 세계 일류도시로 성장

➔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수도권 인구안정화와 질적 발전을 향한 출발점**

■ IMD(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국가경쟁력 ('05년 60개국)
홍콩(2),싱가포르(3), 대만(11), 일본(21), 한국(29), 중국(31)

■ WEF(세계경제포럼) 성장경쟁력('04년 104개국)
대만(4), 싱가포르(7), 일본(9), 홍콩(21), 한국(29), 중국(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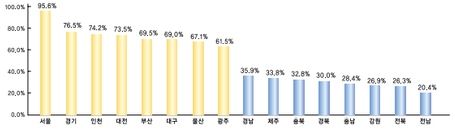


지방에 서울같은 경쟁력을 가진 더 많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만들기

- 3만불 시대 선진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에는 서울같은 경쟁력을 가진 도시들이 더 많이 필요
  - 그러나 우리 지방은 자족기능 및 혁신역량 미흡으로 세계와 경쟁할 성장동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실정

■ GRDP 성장률 (2001년) ■

■ 지역별 재정자립도 (2002년말 기준) ■



- 지방에 자립기반과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은 더 많은 세계도시, 더 많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만들기의 시작

➔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전략산업과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는 혁신도시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에 자립적 발전의 계기를 제공**

수위도시 인구비중과 국가경쟁력 비교

수위도시의 인구 비중이 낮을 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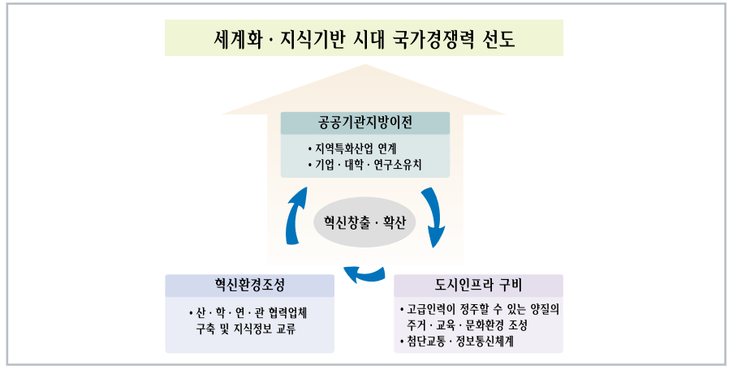
수위도시(국가)	인구 비중(%)	1인당 GDP($)
뉴욕(미국)	2.7	37,368
파리(프랑스)	3.5	29,240
베를린(독일)	4.1	29,138
로마(이탈리아)	4.6	25,570
도쿄(일본)	6.6	33,648
토론토(캐나다)	7.9	21,930
스톡홀름(스웨덴)	8.5	34,002
코펜하겐(덴마크)	9.3	39,504
브뤼셀(벨기에)	9.3	29,250
헬싱키(핀란드)	10.0	31,093
오슬로(노르웨이)	11.2	48,732
런던(영국)	12.1	30,293
서울(한국)	21.4	12,628

OECD 자료 (2003년 기준)

2.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란?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 · 대학 · 연구기관 · 지자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특성화된 미래형 도시



혁신도시 개발구상

-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
- 혁신환경조성
  지역특화발전 관련기능을 유치·육성하고, 개발초기부터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 기능군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중점 유치
  - 혁신주체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연구–생산 협력 프로그램, Inno-cafe, 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센터 등 확충
- 인프라 조성
  혁신도시 전체에서 구성원간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와 주거 · 문화 · 교통 · 통신 등 인프라와 쾌적성 구비
  - 미래형 도시에 걸맞는 첨단 교통 · 정보통신체계 구축
  -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고, 정주할 수 있도록 매력있고 쾌적한 주거 · 여가 환경과 우수한 교육인프라 조성

혁신도시 예시도

II.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미리 보기

▶ 혁신중심지구 :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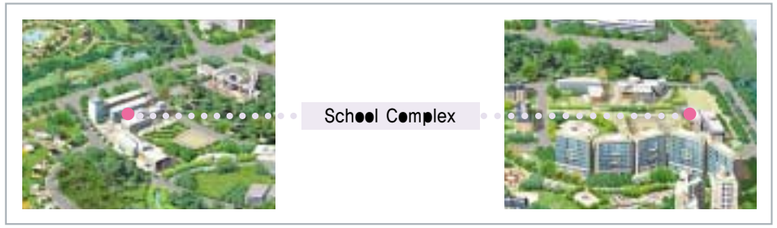
- 혁신주체(산 · 학 · 연 · 관)의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 문화, 여가활동의 중심지

▶ 공공기관 : 혁신도시의 중추적 역할

- 산 · 학 · 연 · 관 협력 네트워크의 연결기능
-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통한 혁신도시의 미래 견인

▶ School complex : 우수인력 정착환경 조성

- 자립형 사립고, 협약학교 등 다양한 학교체제 도입 운영
- 학교시설, 교원확보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혁신도시 유사사례

▶ 혁신도시의 대표적 유사사례로는 국내의 대덕연구단지와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등이 있음

- 대덕연구단지는 첨단기업유치와 연구성과 상업화, 산 · 학 · 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화로 혁신도시 지향
-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국립공과대학, 국립컴퓨터연구소 등이 입주하고, 단지내 연구소 · 기업 등과 네트워킹으로 세계적 혁신단지로 발전

▶ 이들 지역은 긴밀한 산 · 학 · 연 · 관 협력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혁신의 촉매 기능 수행

- 또한 고급기술인력, 벤처자본, 모험적 사고, 양호한 도시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 차지

■ 외국의 혁신도시 유사사례 ■

관련유형	사례
사이언스파크, 테크노폴	소피아 앙띠폴리스(프랑스), 메츠(프랑스) 캠브리지(영국), 시스타(스웨덴), 오울루(핀란드) 등
혁신형 산업단지	도요타시(일본), 신죽(대만) 등
연구학원도시	쯔꾸바(일본)

혁신도시 개발유형

세계 혁신도시

프랑스-소피아 앙띠폴리스

프랑스-스트라스부르크

스웨덴-시스타

3.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이전의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근거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

이전대상기관 선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공공기관 409개 중 345개 (약 85%)가 수도권에 소재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 약 180개 기관에 대해 이전 검토중
〈 공공기관 분포 비율 목표 (수도권 : 지방) 현 85:15 → 35:65 〉

이전 원칙

1 효율성 원칙 :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연계

▶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지역별 전략산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확인

2 형평성 원칙 : 시 · 도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균형있게 배치

▶ [형평성 기준 예시] 광역도 〉 광역시

시 · 도별 배치 방식(안)

▶ 이전대상기관을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기관으로 대분류하여 배치

시 · 도내 입지 방식

▶ 지방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 · 도별로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집단이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

- 이전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지역연고가 있는 등 개별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허용

향후 일정

공공기관 이전 · 혁신도시 건설	소요 기간(월)	사업기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2년
이전기관 발표, 후보지 선정	6	←	→				
환경영향평가	17		←	—	→		
인 · 허가등	17		←	—	→		
용지보상	12			←	—	→	
사옥설계	12			←	—	→	
사옥 건축 및 이전	39				←	—	→

정부-시 · 도지사(서울, 경기 제외)가 합의한 5대 원칙 3. 30 총리주재 시 · 도지사 간담회

1.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협력하여 추진한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최종 확정 · 발표전에 정부와 지자체간 이전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확정후에는 정부부처 · 이전기관 · 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4. 이전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5. 정부와 각 시 · 도는 이전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 주택 · 의료시설 등 정주 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 등에 최대한 노력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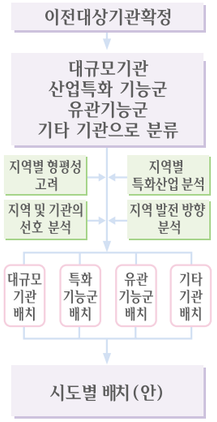
1.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 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시·도별 이전지역 결정과정



4.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직원에 대한 지원

주택 문제 해결

-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경우 주택 우선 분양
  -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따라 근무지가 이전되는 직원은 주택을 우선 공급
-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주공 등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일정 물량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허용

최상의 교육 여건 조성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 등 적극 유치
- 이전지역 내 특정학교에 대한 전·입학 특례를 허용하면서 시설개선, 우수교원 배치 등 집중 지원

혁신도시에 의료·문화·여가 등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 혁신도시는 최상의 업무여건, 웰빙(Well-being) 생활공간으로 조성
  - 충분한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용지 확보
  - 종합병원(국공립 포함) 신설·이전 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싼 값에 부지 제공
  - 진입도로 건설비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지원

기타

- 이사비용 지원, 배우자 직장알선 등

>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는 교육·주거·문화 여건 등 최고의 생활 수준을 갖춰 '우수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우수한 고급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노무현 대통령 말씀 '04.6.3 국정과제회의)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기존 사옥 등의 매각 지원

- 기존 사옥 등은 자체 매각하여 이전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 미매각으로 이전 차질 발생시 토공에서 매입

새로운 사옥 마련을 위한 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입 허용
- 지방이전 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 새로운 사옥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 대체농지 조성비, 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이전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지방이전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법인세 감면
  -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경영평가 지표 개선
  - 지방이전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를 평가 항목에 반영

대전으로 이전한 직원들의 생활만족도 조사

▶ 대전으로 이전한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직원들은 생활만족도가 매우 높고, 수도권에서의 생활과 비교한 삶의 질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국토연구원 조사 '04. 6월)

■ 수도권과 비교한 삶의 질 평가 ('04년 6월 조사) ■

구 분	계	대전청사	대덕단지
계	383명 (100%)	259명 (100%)	124명 (100%)
나아짐	149 (38.9)	118 (45.6)	31 (25.0)
비슷함	176 (46.0)	102 (39.4)	74 (59.7)
나빠짐	58 (15.1)	39 (15.0)	19 (15.3)

혁신도시 생활환경

매력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다양한 형태의 문화·여가 생활 여건 조성

미래형 도시에 걸맞는 첨단교통·정보통신체계 구축

5. 국내 · 외 이전사례

국내사례

대한민국

목 표 서울의 인구분산 및 수도권 집중 완화

추진방식 대통령 지시로 추진

성 과

- 1차계획(1973) 39개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
- 2차계획(1980) 9개 정부기관
- 3차계획(1990) 11개 청단위 기관
- 이와는 별도로 대덕연구단지를 조성 ('73~'92)하여 15개 출연연구기관, 7개 정부기관 등 58개 기관 입주 (17,000여명)

■ 국내 공공기관 이전 사례 ■

구 분	목 적	선정기준	이전기관(59)	이전지역
1차계획 ('73년)	서울인구분산 (EPB)	이전이 용이하고 이전비용이 적은 기관	39 (정부기관, 국영기업 등)	수도권, 울산 등
2차계획 ('80년)	수도권 문제 해결(EPB)	이전이 용이하고 인구흡인 효과가 큰 기관	9 (정부기관, 토지개발공사 등)	과천, 천안, 대전 등
3차계획 ('90년)	지역균형발전 (행자부)	청 단위 기관	11	대전

해외사례

프랑스

목 표 지방균형발전과 국가개혁을 위해 파리 및 수도권(Ile-de-France)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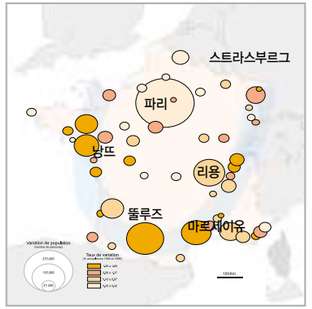
추진체계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서 이전대상 기관을 선정하면 공공기관지방이전위원회(CITEP)에서 시행

- 지자체의 지역개발공사가 이전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이전직원의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

성 과

- 제1차 공공기관 이전정책(1960년~90년)
  - 파리와 파리 이외의 지역간 불균형 개발 문제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문제로 제기돼 1960년 이후부터 공공기관 분산을 꾸준히 추진, 30여년간 25,000여명 이전
- 2차 공공기관 이전정책(1990년~현재)
  - 1990년 들어 프랑스 정부(크레송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분산을 강력하게 천명, 국토개발장관회의에서 지역간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시설, 공기업들의 이전계획을 발표. 약 30,000명이 이전하여 스트라스부르그, 마르세이유, 뚤루즈, 보르도 등 내륙 및 변방지역이 특색있게 고루 발전함으로써 EU통합이후 프랑스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

■ 프랑스의 분산적 발전 사례 ■



해외사례

영국

목 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활동의 지역간 균형강화 및 정부의 근대화

성 과

런던과 남동부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

- 60년대 Flemming 정책시기 : 22,500여명 이전
- 70년대 Hardman 정책시기 : 1,100여명 이전
- 80년대 후반 Next Step Initiative 정책시기 : 14,000여명 이전
- 2003년 Lyons 정책 : 2010년까지 20,028명 이전계획

특 징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런던과 그 주변에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

- 런던과 동남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무공간을 사거나 보수하는 정부부처와 출연기관은 장차 재무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스웨덴

목 표

스톡홀름 및 스톡홀름권으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성 과

'70년대에 인구 10만명 이상의 16개 도시(스웨덴 3대 도시인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는 제외)에 11,000명 이전

- 최근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지방개발정책' 이라는 또 다른 이전정책 계획 중

아일랜드

목 표

국가발전계획의 핵심 목표인 지역균형발전(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사업의 일환(2003년 재정부 장관이 발표)으로 시행

추진체계

지방분산추진위원회와 공공사업관리청이 이전정책 주관, 이전작업의 책임은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맡음

- 각 부처는 지방분산전담반을 구성하며 이 전담반은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와 소속 장관에게 진행상황 보고

특 징

다른 나라와 달리 공공기관만이 아닌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까지 이전대상

- 국가 공간전략이라는 국토정책의 틀에 의거하여 이전지역을 선정하며 이때 중요시되는 원칙은 기능의 클러스터
- 프랑스에 비해 이전정책의 주체로서 개별 정부부처의 역할이 중시
- 영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일괄이전 계획을 중앙조정식으로 집행

일본

목 표

동경 일극집중 구조의 시정과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

추진체계

각료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방침 결정('88.1),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되는 국가기관 등의 이전추진연락회의의 설치

-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88.6)을 제정, 국가기관 등의 이전을 위한 근거 조항 명시 (촉진법 제4조)

성 과

02년까지 59개 국가기관 및 30개 공공법인 이전

혁신도시 이야기

소피아 앙띠폴리스(Sophia Antipolis)

시사점 및 성공요인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동시 달성
- 지자체 · 산 · 학 · 연 협력에 의한 성공

특 징

- 98년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10대 혁신지역과 지식선도지역, 유럽3대 지식선도 지역에 들만큼 지역 경쟁력 제고 사례로 손꼽히는 지역
- 프랑스 남부 니스 인근의 중소도시, 토지는 메말라서 농업엔 적당하지 않았고 세계적인 일급휴양지로 관광만이 유일한 산업이었던 이곳에, 64년 데빠르망 정부가 개발을 시작
-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 산업적인 전통이나 자산은 전혀 없는 황무지였던 지역에서 1,200여개가 넘는 기업과 2만5천여명에 달하는 고급일자리를 창출

혁신의 배경

- 국립 파리공과대학 학장인 피에르 라피테가 제안한 '과학과 문화와 지혜의 신도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프로젝트로, 라피테는 1960년 르몽드지에 발표한 "Latin Quarter in the Field" 기사에서 "파리 세느강 주변의 대학들과 대학주변의 카페 레스토랑, 서점들에서 발산되는 역동성을 재현한 첨단기술신도시" 건설을 주장
- 니스 국제공항과 48개 도로가 통하는 고속 도로등 도로 네트워크와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 IBM 연구센터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입지했고, 이미 30년전에 지식기반 경제에서 핵심기술인 정보기술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

■ 소피아 앙띠폴리스의 발전과정 ■

1960 피에르 라피테 잡지기고 • 1972년까지 준비기 • 1973-1981 형성기 • 1982-1989 성장기 • 1990년 이후

지역자원	세계적인 관광휴양지 (국제공항과 지중해)
비전제시자	과학과 문화와 지혜의 신도시 건설 (피에르 라피데)
핵심기업	IBM 연구소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입지 (1962년)
핵심교육 및 연구기관	국립공과대학 및 국가 과학연구소 이전
지방정부	1975년 SYMIVAL 조직
중앙정부	1982년 지방분권법, 제9차 계획계약(1984-1988)지역 개발사업으로 인정
전국적 인지	1989년 테크노 폴리스의 프랑스 모델
세계적 인지	1998년 뉴스위크 세계 10대, 유럽 3대 지식기반선도지역

III

Q&A

Q&A

Q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A
- 통계청은 지금 이대로 가면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이가 2011년에는 51.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더 이상의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 전망합니다.
  - 프랑스도 1960년초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파리권 인구안정(전국인구대비 18% 수준)에 성공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방의 고학력 취업 기회 확대,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방세수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약 180개 공공기관(약 3만 2천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의 고용증가 13만3천명, 연간 생산유발 9조3천원, 연간 부가가치 4조원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중장기적으로 지방대학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로 지역의 혁신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덕지역 벤처창업의 35%가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기관 출신)

Q 공공기관 이전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A
-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특성과 지방의 특성을 연결시켜 옮깁니다.
  - 기능이 비슷한 기관들을 묶어 지역의 특성과 연결시켜 이전하게 됩니다.
  -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혁신 여건을 갖추어 업무 생산성을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망의 발달로 유기적 업무협조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옮겨 갈 혁신도시(지구)는 새로운 행정도시로부터 1~2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게 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이전할 2010년에는 정보통신과 교통망이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질 것입니다.

Q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배치가 정치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A
-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와 지방간에 합의한 원칙에 의해 추진됩니다.
  - 이전원칙과 기준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의 최종 확정 · 발표 전에 정부와 지자체간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기본 협약을 체결합니다.
- 이전 기관의 지역별 배치는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연계하여 하되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Q 혁신도시 입지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A
- 혁신도시는 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되도록 광역적 관점에서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입지는 시 · 도지사가 지역 및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정부가 지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A

Q 언제 이전하나요?

A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어 중앙정부기관이 이전하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올해 상반기 중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혁신도시의 입지가 정해지고 혁신도시건설 기본계획에 착수합니다.
  - 내년에는 용지보상 및 도시설계 등이 이루어지고 2007년에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 이전지역과 이전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10년부터 실제 이전을 시작하고 2012년에는 이전을 완료합니다.

Q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까?

A
- 정부는 2003년 6월 공공기관 이전 구상을 발표한 이후 정부내 추진조직 및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연구와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 특히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3년 12월 국회 통과)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명시하였고 2004년 8월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시 · 도지사 간담회, 수도권 정책설명회, 노조와의 대화, 전문가 의견수렴, 국회보고 등을 거쳤고 정부와 시 · 도지사간 이전원칙 합의(05년 3월 30일)도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요 정책 설명회 일정

분 류	지역 및 내용
지방 정책설명회 (2004. 12.9 ~ 12.28)	강원(춘천) 12.9 / 전북(전주) 12.14 / 광주 · 전남 · 제주(광주) 12.17 / 대구 · 경북(대구) 12.21 / 경남(창원) 12.23 / 부산 · 울산(부산) 12.28
수도권 정책설명회 (2005. 1.19 ~ 1.27)	인천 1.19 / 경기 동북부 1.20 / 경기 서부 1.26 / 서울 강북 1.27
기관설명회 (2005. 3 ~ 현재)	장 · 차관 주재 기관 CEO 간담회 (3월) 공공기관 직원 대상 설명회 (4.12 ~ 현재)

Q 혁신도시가 기존의 신도시나 공단배후도시 등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A
- 기존의 신도시나 공단배후도시가 팽창하는 도시나 공장지대의 주거공간 역할만을 담당했다면, 혁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첨단 네트워크 환경을 모두 갖추어 우수인력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은 혁신창출과 우수인력을 동시에 담기에는 공간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 혁신도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창출, 전파 및 응용을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리콘밸리(미국), 시스타(스웨덴), 소피아 앙띠폴리스(프랑스) 등이 혁신도시의 사례입니다.

Q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녀 교육 등 생활여건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A
-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 원칙은 "현재 상태보다 좋은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제4항)에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재정적 · 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회와 협조하여 이전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법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전기관은 지자체와 구속력있는 이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에 지원방안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전지역내 특정학교에 대한 전입학특례허용, 특목고 유치, 시설개선 우수교원 배치 등 우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지원할 것입니다,
-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 혁신도시내 우수인력 정주가 가능한 여건 조성, 기타 배우자 직장 알선 등으로 생활여건이 반드시 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